

光州日뢖



광주 백운교차로 교통대란 현실화



1989년 11월 개통된 백운고가 차도가 31년만에 철거 된다. 4일부터 철거될 백운고가는 길이 385.8m, 폭 15.5m로 백운동에서부터 주월동까지 도심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백운고가 차도 철거 공사까지 맞물리면서 광주의 주요 교통 관문인 백운광장 인근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 기자 jeans@

고가차도 철거·도시철도 2호선 건설·아파트 공사 겹쳐 광주시 교통 대책 효과 제한적 ···"우회도로 적극 활용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함께 광주 남구 백운 고가차도 철거가 시작되 면서 차량 정체 등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교통 불편 최소 화를 위해 교차로 운영 변경, 우회 노선 정 비 등의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공사 기 간 중 교통 체증 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백운 고가 차도의 철거 공사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모든 차량이 통제된다.

고가차도가 위치한 백운 교차로는 지난 해 11월부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립 공 사가 진행되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 어지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해 있는 봉선동과 주월동의 주요 진입로 인데다 동구와 서구, 남구를 잇는 관문 역 할을 하고 있는 대남대로의 주요 길목이 어서 광주에서도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 중하나이기 때문이다.

백운교차로는 2018년 기준 광주에서 12번째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일일 교 통량이 14만여대로, 남구 교통의 중심지 다. 이 가운데 5만3000여대가 백운 고가 차도를 이용했다.

백운고가 철거를 위해 고가도로 진입이 통제되면 기존에 이 고가도로를 이용하던 5만여대가 지상 도로를 사용해야 하기 때 문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맞물려 교통 체증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

스쿨존 주정차 금지 아이들 등교는? ▶6면

KIA, 외국인 선수 맞대결서 완패 ▶18면

도시의 오아시스─광주시민회관 ▶22면

다. 여기에 백운광장 인근에 각종 아파트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차량 정체 등의 교통 불편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 다. 특히 백운고가차도 구조물은 오는 11 월까지 철거되지만, 오는 2023년까지 도 시철도 2호선 공사와 지하차도 건설 등이 이어지게 되면서 장기간 교통대란이 우려 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진월동 서남대로에서 봉선동 대화아파트로 바로 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제2순환도로 진월 IC 진·출입로를 개선해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진월동~봉선동 우회도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 확보조차 되지 않아 공사 시점이 불투명한상태다.

진월 IC 진·출입로 개선 공사 또한 최근 시공사를 선정, 내달 중 공사를 시작할 예 정이지만, 백운교차로 공사가 끝나는 2023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기간 중 백운교차로 공사로 발생하는 교 통 대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아닌 셈이 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백운고가 철거 공 사를 앞두고 최근 우회로 활용, 추가 차로 확보 등의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교 통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백운광장 주변 교통섬 내 지장물을 이설한 뒤 ▲남구청에서 남광주 방향 ▲남광주에서 백운광장 방향 ▲백운광장에서 동아병원 방면 도로에 최소 2개 차로를 추가한다. 또한, 백운고가 차도 교차로 내 1곳(동아병원→백운초교 방면)은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백운광장 주변 5곳에 대해서는 좌회전을 허용하는 등 주변 신호체계도 변경한다. 좌회전 허용 지역은 ▲양림휴먼시아 2차 교차로 ▲미래아동병원 교차로 ▲남광주농협앞 교차로 ▲백운초교 사거리 ▲주월교차로등 5곳이다.

백운고가 차도 4개 방면에 대해서는 우회 노선 정비 등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정비되는 우회 노선은 ▲봉선지구에서 농성광장 방면 ▲농성광장에서 광주대 방면 ▲광주대에서 대성초교 방면 ▲남광주에서 농성광장 방면 등이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등에는 우회도로도 상당한 교통체증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차량 정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백운광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실시간 교통정보와 공사 안내 홍보문 등을 확인하고 우회도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1대 국회 높아진 개혁 열망 광주·전남 의원들 활약 기대

21대 국회가 지난 30일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호남정치 복원에 대해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순천 출신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어 영광이 고향인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당 대표 도전을 앞두고 있어 '개헌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거대 여당에 포진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덩달아 기대되고 있다.

또 지난 4·15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300명 중 초선이 절반을 넘는 151명(50.3%)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개혁에 대한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은 5·18관련 법,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을 자신의 첫 '작품' 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 으로 정해 올해 내에 입법을 마무리 지

21대 국회에 입성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너져버린 호남정치를 정상화 하겠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권 주자 지지 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위원장의 당 권 도전에 따라 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여 의도 연착륙'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호남에서 민주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중앙정치에서 호남의 역할

을 강화하고 호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호남출신 정치인들 이 중앙정치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삼석(영암무안군신안) 국회의원은 "농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한 가칭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제고를 위해 '노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앞장 서겠다"며지역을 위한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

이 지역 대부분 국회의원들도 SNS를 통해 "초심을 지키겠다, 지역을 위해 봉사 하겠다,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겠다"며 각 오를 다졌고, 지난 총선 이후 지역 시·군· 구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또 이 지역 국 회의원들은 사전에 지역별 현안 사업을 논의한 뒤 전략적인 상임위원회 신청을 하는 등 개원 전부터 손발을 맞췄다.

국회는 오는 5일까지 의장단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은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총선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오는 8일 상임위원장 배정이후 구체화 할 전망이다. 송갑석 의원과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서삼석 의원 등의 상임위 위원장 또는 간사 배정 여부도 관심사다. 또 이 위원장의 당권 도전 못지 않게, 광주·전남지역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최고위원이 배출될 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3일부터 고1, 중2, 초3·4학년 등교수업

확진자 증가 속 3차 개학 어린이집 운영도 정상화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도 등교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 초·중·고교생 일부 학년이 3차 등교를 시작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1일부터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함에 따라어린이집 운영도 정상화된다.

〈관련기사 2면〉 31일 교육부와 광주시·전남도교육청 등 에 따르면 오는 3일 고1·중2·초등3~4학 년이 첫 등교를 하게 된다. 대상 인원은 모 두 178만명에 이른다. 이미 지난 20일부터 매일 등교수업을 받는 고3학생 44만명과 지난주 처음 등교 한 고2·중3·초1~2·유치원생 등 1·2차 등 교 인원을 포함하면 앞으로 매일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움직이게 된다.

최근 이태원 클럽 및 경기 부천 쿠팡물 류센터발(發) 확진자 증가세에도 교육부 는 4차까지 예정된 등교 수업 개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순차적 등교 계획을 유 지하는 건 아직 생활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되지 않았고, 확진자 증 가세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 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